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이 브로슈어는 OECD 불법무역방지작업반 후원 하에 준비되었으며, OECD 무역 및 농업 총국에서 발행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작업물의 모든 디지털 또는 인쇄 사용은 <https://www.oecd.org/termsandcondi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서문

위조품의 불법 무역이 혁신 주도의 글로벌 경제를 점점 위협하면서, 공급망의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과 경제 성장,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혁신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위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OECD는 해당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무역: 경제적 영향의 지역별 현황(*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2016*)”을 위시한 여러 보고서에 제시되었다. OECD는 또한 “위조 및 불법 복제와 스웨덴 경제(*Counterfeiting and Piracy and the Swedish Economy, 2019*)”, “위조품 무역과 영국 경제(*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the UK Economy, 2019*)”, “위조, 불법 복제 및 스위스 경제(*Counterfeiting, Piracy and the Swiss Economy, 2021*)”, “위조품 무역과 이탈리아 경제(*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the Italian Economy, 2021*)” 등 동 보고서와 유사한 여러 국가별 사례 연구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는 주로 혁신과 지식 재산(IP)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의 IP 집약적인 산업은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긴밀히 통합되어 있다. 혁신과 세계 무역 질서와의 통합이 한국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그 때문에 위조와 불법 복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조품 거래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려면 먼저 그러한 거래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위조품 무역의 규모와 그러한 거래가 한국의 지식재산권(IPR) 보유자 및 한국 정부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담겨 있다. 사실 기반의 객관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위조품 무역의 규모와 범위를 측정하고 대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했다. 이 방법론은 고유의 국제 세관 압류물 데이터, 세관 및 IP 전문가와 한국 업계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주로 활용했다. 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가 위조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이 분야의 주요 거버넌스 격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 보고서는 정책 담당자가 불법 무역으로 인해 악용되거나 유발되는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에 입각한 연구와 고도의 분석 기법을 주로 활용하는 OECD 불법무역방지작업반(OECD Working Party on Countering Illicit Trade)의 후원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 요약

위조품 불법 무역은 그 범위와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지재권 보유자 및 정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비자는 위조품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저품질의 위조품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진다. 적법한 지식재산권(IPR) 보유자는 위조품으로 인해 매출 손실, 수익 감소, 혁신 인센티브 하락 및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위조품으로 인한 세수 하락과 실업률 상승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위조 방지 법령을 제정하는데 추가로 비용을 들이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상당한 수준의 정부 지원과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혁신적인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다. 한국 경제는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에 긴밀히 통합되어 한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지식재산(IP)이 위조와 도용의 대상이 되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혁신과 세계화는 한국 경제를 위조상품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무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특히 한국 지재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 규모와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을 통해 위조 대상이 된 제품 범주, 위조품의 주요 출처국(유래국), 주요 교역로 및 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출 손실과 수익 감소, 한국 정부의 세수 손실 및 한국 내 일자리 감소 등 위조로 인한 여러 손실을 평가했다.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위반하는 위조품 무역에 대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추세가 악화되긴 했으나 위조품의 절대량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주요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꼽혀왔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위조품이 확대되어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행동과 판매 채널이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요 조사 결과

위협의 범위와 규모

-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총 국제 교역액은 2021년 최대 11조 960억원(미화 9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위조된 “한국산” 전자 제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6조 9780억원(미화 61억 달러)에 달해, 한국 위조품 총액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흔히 위조되는 한국 제품은 휴대폰, TV, 스크린, 배터리와 관련 부속품(헤드폰, 케이블, 충전기, 케이스 등)과 같은 전자 및 통신 장비였다. 그 밖에 위조 대상 한국 제품은 주로 컴퓨터와 주변 장치, 자동차 부품 등이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21년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로 인해 6조 9780억원(미화 61억 달러), 즉 같은 해 총 매출액(내수 및 수출 합산)의 0.6%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분야 제조업은 위조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2021년,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거래로 인해 한국 제조 부문에서 13,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9,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 2021년, (i) 한국 지재권 보유자의 매출 하락과 수익 감소 및 (ii) 개인소득세수 감소와 사회보장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한 한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1.8조원 (미화 15.7억 달러)에 달해, 두 세원에서 징수한 총 세수의 0.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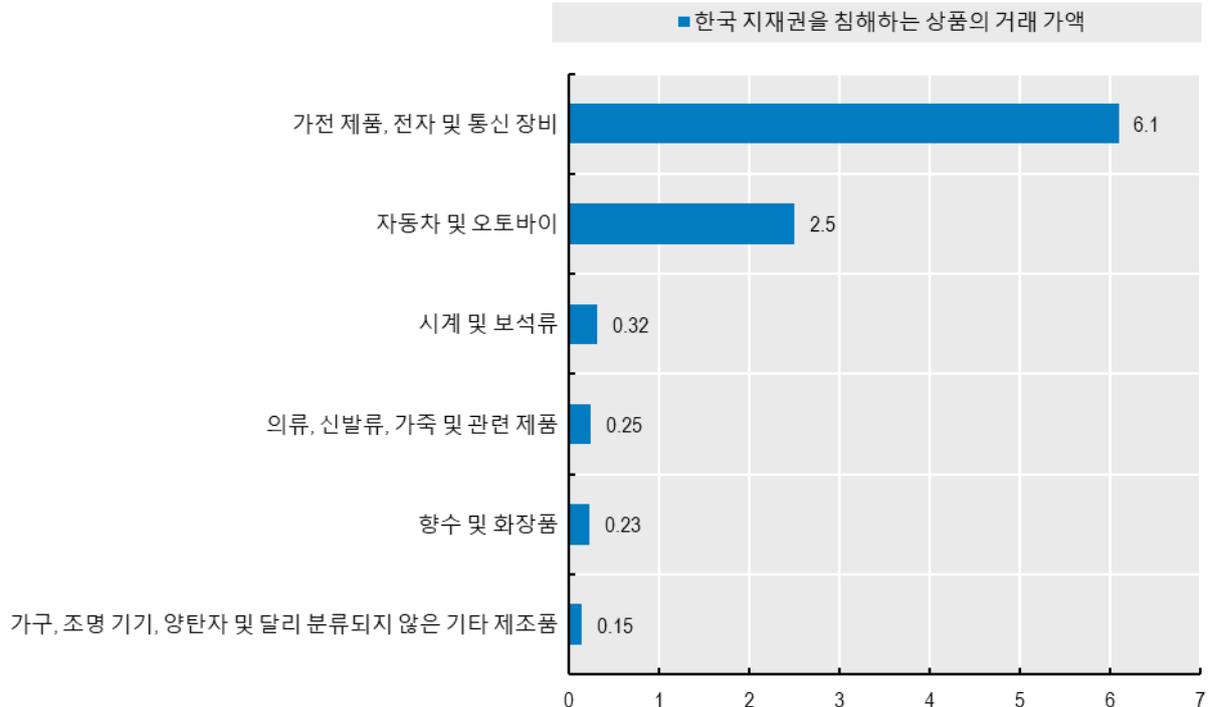
국제 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한국 지식재산 침해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제 거래 위조품의 총 가액은 얼마나 되는가?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11조 960억원(미화 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한국 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관련 한국 상표와 특허는 특히 국제 교역에서 위조 대상이 되었다. 해당 부문은 2021년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제 교역액의 62%(한화 6조 9780억원, 미화로는 61억 달러)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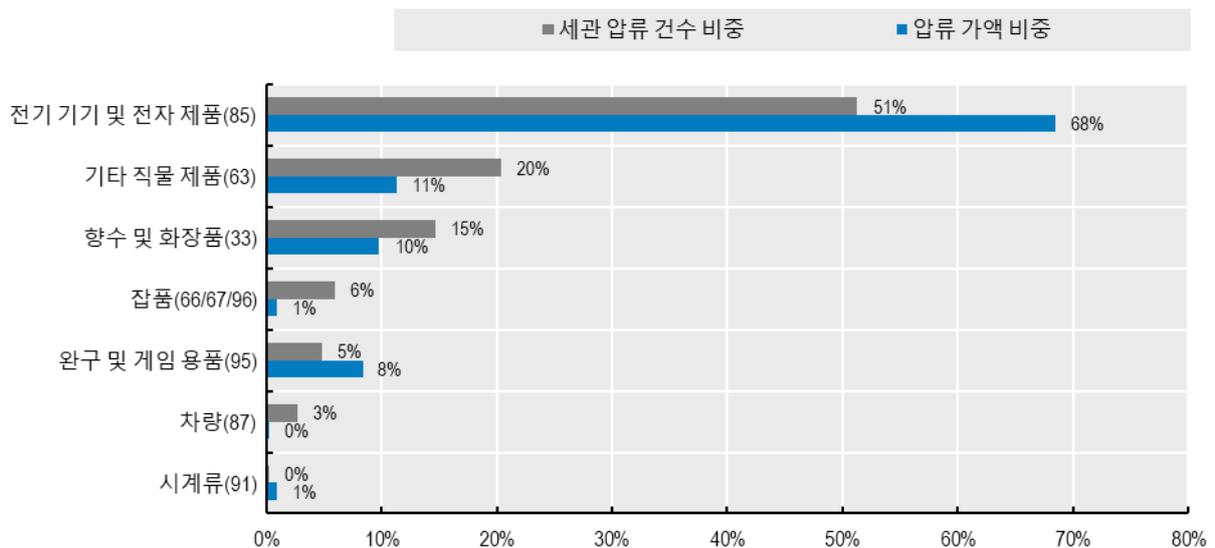
그림 1: 부문별 한국 지재권 침해 상품의 무역액(2021)



어떤 유형의 한국 제품이 위조되는가?

2020-2021년 사이 위조로 최대 피해를 입은 한국 제품은 전기 기기와 전자 제품이었다.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 전자 제품이 한국 지재권 침해로 인해 압류된 제품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다. 이 범주에는 휴대폰, ICT 부품, 휴대폰 액세서리(충전기, 이어폰, 케이블 등)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상품 압류물이 포함된다. 직물류와 화장품 역시 위조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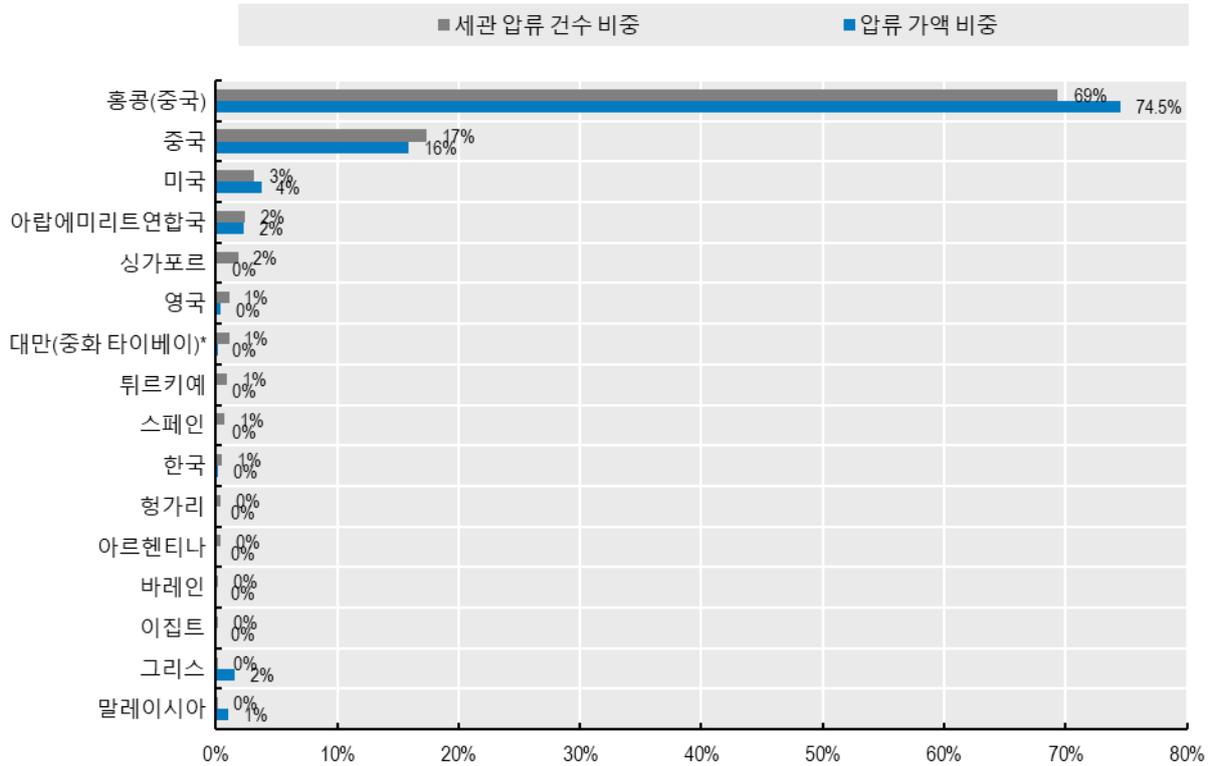
그림 2: 한국 지재권을 위반하는 위조품 상위 제품 부문(2020-2021)



위조품 거래국

2020-2021년 사이 한국 지식재산 침해로 압류된 위조 제품은 대부분 홍콩(중국)과 중국(그림 참조)이 출처국(유래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세관 압류물 비중은 각각 69%와 17%를 차지했다. 압류 가액 기준으로도 홍콩(중국)과 중국은 한국 지재권 침해 위조품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3: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압류품 상위 출처국(유래국)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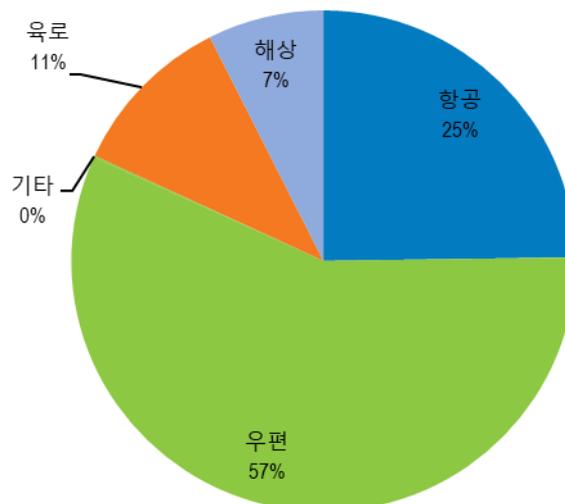


출처: OECD 국제 세관 압류 건수

운송 방식

2020-2021 사이 한국 위조품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운송 방식은 우편 배송으로,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든 위조 상품 압류물의 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항공 운송(25%)이었다.

그림 4: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압류품 운송 방식(2020-2021)



주: 2020-2021년 위조 압류 데이터의 수집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특송(Express Courier)'을 구별할 수 없다.
출처: OECD 국제 세관 압류 건수.

위조품의 한국 지재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구매하는가?

한국 지재권을 침해한 국제 교역품의 59% 이상은 소비자가 위조품인 것을 알고도 구매하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가정용 문화 오락 상품은 8.2%, 의류, 신발류, 가죽 및 관련 제품은 73.8%를 차지하는 등 이 비중은 제품 범주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2차 시장의 비중은 완구 및 게임 용품과 화장품처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조품의 경우에는 낮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1: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주요 위조품의 2차 시장 비중(2020-2021)

부문	2차 시장 비중(알면서 구매)
가정용 문화 오락 상품	8.2%
향수 및 화장품	33.3%
자동차 및 오토바이	43.2%
시계 및 보석류	46.0%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59.7%
가구, 조명 기기, 양탄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품	61.3%
의류, 신발류, 가죽 및 관련 제품	73.8%
합계	59.5%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거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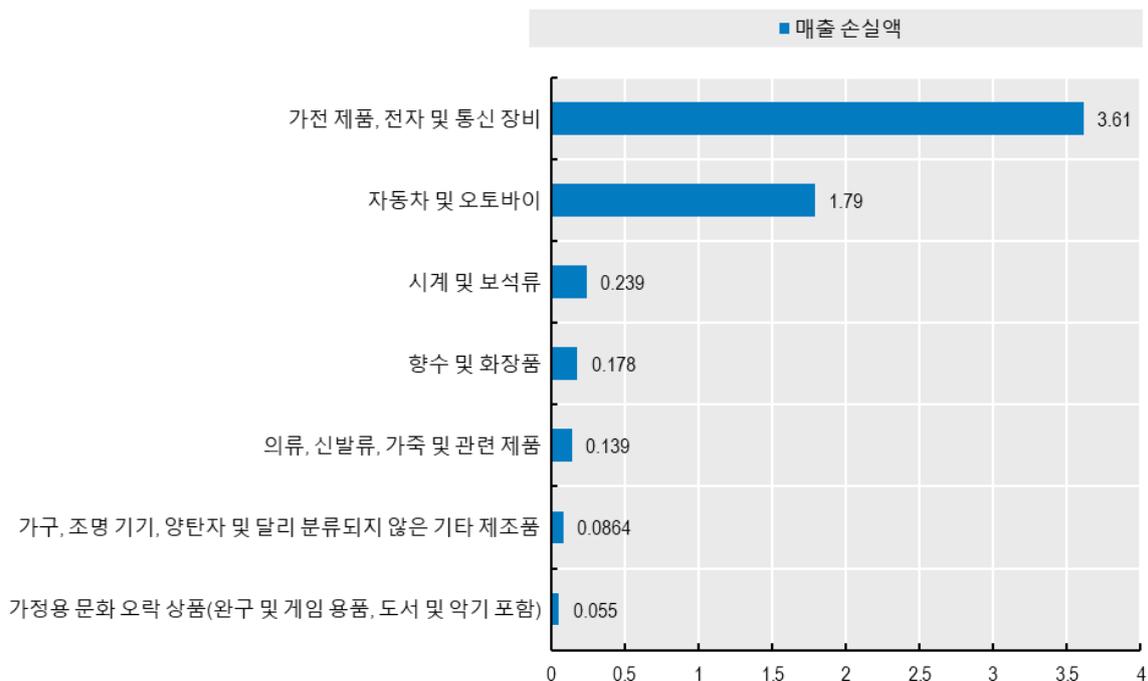
한국 기업의 매출 손실

2021년, 국제 교역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한국 기업의 매출 손실 총량은 6조7980억원(미화 61억 달러)으로, 같은 해 한국 기업 총 매출액의 0.6%에 달했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부문의 제조업은 위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로, 2021년 피해액은 4조 1180억원(미화 36억 달러)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분야 피해액은 2조 590억원(미화 18억 달러)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 제조와 ICT 산업은 상대적으로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해 각각 21.7%와 13.4%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지재권 침해로 매출 손실을 입은 한국의 주요 제조업(2021)

단위: 미화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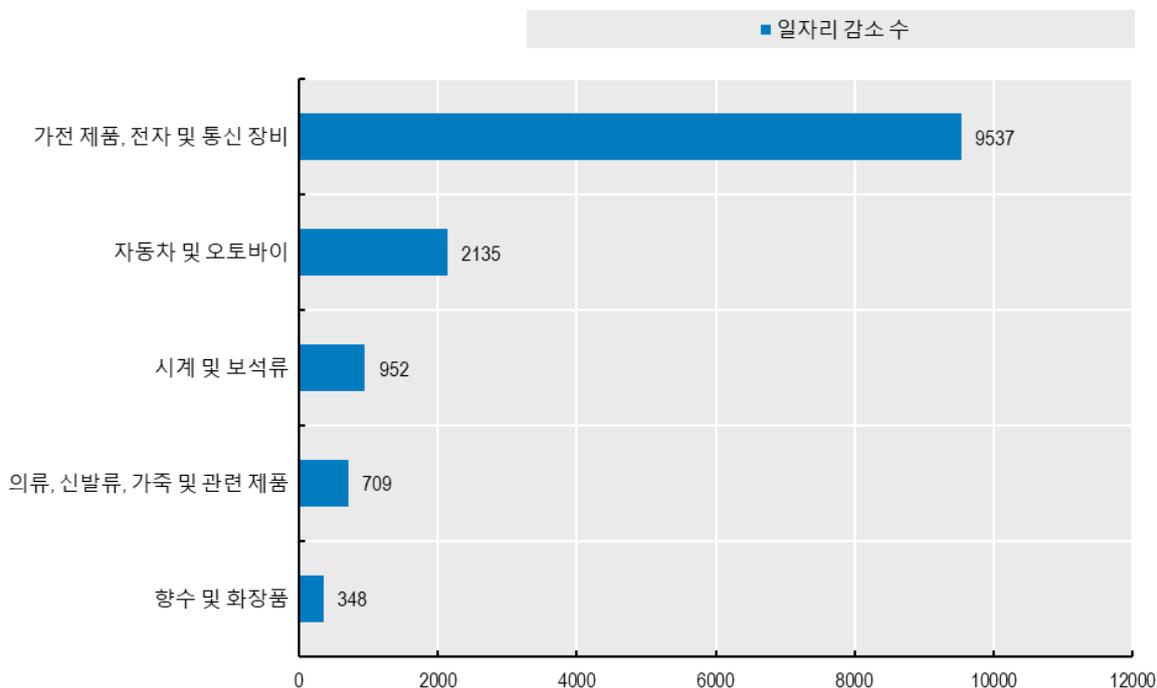
출처: OECD 추산액

한국 내 일자리 감소

글로벌 규모로 진행된 한국 IP 침해로 인해 한국 내 총 일자리 수는 2021년 13,500개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한국 제조업 부문 전체 근로자 수의 0.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위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2021년 9,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그림 6: 지재권 침해로 인해 일자리 감소 피해를 입은 한국의 주요 제조업(2021)



출처: OECD 추산액

한국 정부의 세수 감소

매출 및 수익 감소는 한국 지재권 보유자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를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한국 정부가 징수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21년, 이러한 세수 감소액은 1.8조원 (미화 15.7억 달러)에 달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 총 징수액의 0.65%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제 교역에서 한국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고 세입 감소(2021)

조세 유형	액수(단위: 미화 100만 달러)	비중
개인소득세 및 근로자의 사회보장부담금	937.02	0.55%
법인세	633.12	0.91%
합계	1570.14	0.65%

출처: OECD 추산액 및 2020 OECD 조세수입 통계 <https://doi.org/10.1787/8625f8e5-en>.

한국 지재권 침해 대응: 주요 과제와 전략

전자상거래 및 소형포장물의 급증

한국 위조품은 온라인 구매가 잦은 편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환경 이용이 대폭 늘어났다.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소형포장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위탁 배송물의 상세 내역에 내용물과 다른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 위조 상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소형포장물 운송 업체 및 정기 배송 서비스 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높은 지재권 침해 비용

위조는 한국 경제와 한국 지재권 보유자에게 높은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준 미달 위조품(예: 한국 인삼, 한국 기초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매출 및 일자리 감소 외에도 위조 범죄 근절 조치와 모니터링은 특히 한국 중소기업과 같은 지재권 보유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의 위험과 위조업자의 수법을 알리는 인식 제고 캠페인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 특허청(KIPO)은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주관한다.

시행 및 협력의 핵심 역할

더욱 적극적인 위조 방지 활동을 위해서는 세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경에서 물품 검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조 현장을 적발하는 등 치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침해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과 같은 지재권 담당 부처와 지재권 담당 및 세관 직원들 간 협업을 통해 강제 집행 메커니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 앞으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같은 지재권 담당 기관과,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특히 아시아 플랫폼 내 위조품 게시 단속 조치를 간소화하려는 해당 업계 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개 민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유일한 협의체이다. OECD는 각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와 정보 경제 및 인구 고령화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안과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불법무역방지작업반(WP-CIT)은 정부 대표, 정부 간 기구(IGO), 학계 및 업계의 관련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WP-CIT는 불법 거래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중대 글로벌 거버넌스 격차와 불법 거래 가담자들이 악용하는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다. 이를 바탕으로 WP-CIT는 거래 투명성과 보안을 증진하고 강화하여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체제를 지원해왔다.

